

또 퇴짜 맞은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자 보호 미흡”

美 SEC, 두차례 연장 끝 결국 거부
조작 가능성, 관련 규제 부족 우려
승인 거부에 비트코인 한때 하락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소식에 하락했다. /유투이미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 관련규제와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단 이유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 CNBC 등에 따르면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산하 BZX거래소가 반에크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기 위해 SEC에 규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SEC가 이를 거절했다. SEC는 CBOE 측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ETF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 처럼 거래할 수 있는 투자신탁상품이다.

여러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신청했으나 SEC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장에 사기와 조작 가능성이 있고 관련 규제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SEC는 결정문을 통해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가 가장매매, 비트코인 시세 조종세력, 비트코인 네트워크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한 해킹,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대한 악의적인 통제, 허위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반한 거래

등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달 비트코인 선물 ETF의 잇따른 출시를 허용해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지만 결과가 아쉬웠다는 평가다. 미국 1호 비트코인 선물 ETF인 프로세서스의 '비트코인 전략 ETF'는 현재까지 14억달러의 자산을 축적했다.

이런 기대감 반영으로 비트코인은 지난 10일(현지시간) 6만9000달러(약 8200만원)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SEC가 반에크의 비트코인 ETF 승인을 거부하면서 지난 12일(현지시간) 한때 비트코인 시세는 6만2294달러(약 7352만원)까지 떨어졌다. 최고가 대비 10.3% 하락한 것이다. 현재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6만4403달러(약 7800만원) 대로 회복됐다. 국내 시세도 SEC 영향을 받아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썬에 따르면 14일 정오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28%(22만3000원) 하락한 7845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현물 ETF가 등장하면 선물 ETF와 비교해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SEC가 불가 입장을 고려하면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으로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SEC의 지속적인 거절로 승인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전망한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반응과 최근 NFT(대체불가능 토큰)나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 메타버스 등 미래 산업과 연결할 만한 코인들도 많아 코인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中 집값 6년 만에 하락... 부동산 위기 우려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정부 규제, 헝가리 사태 등에 하락
부동산 개발기업 유동성 위기
분양시장 위축 심화로 악순환

중국의 신규주택 분양가격이 지난 2015년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부동산 규제 지속, 헝가리 사태 발생, 부동산세 도입 움직임 등에 따라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중국, 신규주택 분양가격 6년 만에 하락전환'에 따르면 9월 기준 중국의 신규주택 분양가격이 전월 대비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주택 가격의 경우 이미 지난 8월부터 전월 대비 0.02% 줄었다. 이어 9월에는 0.2%까지

떨어지며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 분양면적도 7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체 부동산 거래면적도 10~11월 중 감소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향후 주택가격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더라도 크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문 디레버리징(차입비율을 낮추는 것) 의지를 감안해서다.

앞서 한정 부총리는 부동산부문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헝가리 사태 등으로 인한 분양시장 위축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에서의 악순환 가능성도 우려했다. 분양시장 위축에 따라 판매 부진으로 인한 부동산 개발기업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 이후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 주택자산을 저가에 분양하면서 분양시장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중국 정부의 디레버리징 의지를 감안할 때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면서도 “헝가리 사태 등으로 인한 분양시장 위축으로 일부 부동산 개발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에서의 악순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유류세 인하 첫 주말... 휘발유 1600원대

유류세 인하 시행 후 첫 주말인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16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뉴스1

中 부동산 ‘돈맥경화’ 심화... 차입비용 고공행진

차이나 뉴스&리포트

차입비용 10년來 최고치
추가 디폴트 불가피할 듯

중국 부동산 시장의 돈이 막히면서 연쇄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차입비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14일 FT중문판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고위험·고수익채권)는 투매 위기를 겪었고, 차입비용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3대 마지노선’ 정책을 내놓았다.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 순부채비율, 단기 부채 대비 현금보유비율 등 3가지 지표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은행 부채에 의존해 사업을 확장하던 대부분의 부동산 개발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추가 자금조달 창구가 아예 막히고 말았다. 대규모 투자로 몸집을 키우던 헝가리 그룹이 위기에 빠진 것도 이런 고강도 규제가 시행되면서다.

중국 부동산 기업이 발행한 달러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헝가리 신리홀딩스, 화양년홀딩스 등 대형사들의 연이은 채권 연체와 맞물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이달 들어서만 10bp 확대됐고, 하이일드 채권의 약세는 투자등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사인 에버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부채 담당자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규모 유동성 위기의 결과다”라며 “이런 환경에서 외부 자금 조달이든 내부 현금이든 장기적으로 버텨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서 차입규모가 가장 컸던 곳 중 하나인 자자오에그룹(카이사 홀딩스) 역시 디폴트 위험에 놓였다. 자자오에는 지난 주 초 유동성 부족으로 일부 투자상품에 대해 상환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며, 역외 채권의 만기도 다가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 둔화에 기업들의 자체 현금흐름 창출력도 약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지 않을 시 추가 디폴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맥쿼리의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래리 후는 “앞으로 더 많은 채무 불이행 사태 발생할 수 있고, 유동성 위기는 다른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확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채권 규모는 1040억 달러다. 중국 부동산 기업 중 50% 이상이 신용등급 B등급 이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상환액 크고, 주담대 보다 연체율 ↑

>> 1면 '비주담대 증가세'서 계속

차주별 평균 상환액도 크다. 비주담대 차주들의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 기준 1억7000만원으로 주담대(9000만원), 기타대출(2000만원) 등에 비해 차주의 채무 상환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담대의 상환방식과 금리유형을 살펴보면 만기 일시상환·변동금리 비중이 지난해 기준 각각 75.5%,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비율별로는 LTV가 70%를 초과하는 고LTV 비주담대 비중이 지난해 20%로 가계 주담대(7.7%)에 비해 크게 높았다.

◆금융당국, 상호금융 DSR 강화
금융당국은 타 업권에 비해 느슨

했던 상호금융권의 대출관행을 손볼 예정이다. 올해 불거진 LH사태 등으로 비주담대의 부동산투기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내년부터 상호금융권의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을 기존 160%에서 110%로 하향 조정한다.

기존 상호금융권의 가계 비주담대 차주 평균 DSR은 2019년 1분기 기준 364%로 주담대, 신용대출에 비해 크게 높았다.

A상호금융 관계자는 “올해 상호금융권 비주담대는 기업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 부동산 관련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따른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내년도 DSR 하향에 따라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 대응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